

ETSI를 다녀와서



최 병 일
통신개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필자는 금년에 수행하고 있는 체신부 정책과제인 「전기통신의 표준화제도 정립」과 관련, 지난 3월 중순경 2주간 유럽출장을 다녀왔다. 이태리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학회(IT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의 세계학술대회 참가로 시작된 출장일정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CCITT(International Telegraph &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등 전세계적 차원의 표준화기구 방문을 거쳐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방문으로 이어졌다.

ETSI는 니스에서 북서쪽 내륙지방으로 들어간 곳에 있는 소피아 안티폴리스(Sophia Artipolis)에 자리잡고 있다. 소피아 안티폴리스는 그 지리적 여건때문에 최근에 와서 급성장하고 있는 일국의 과학기술단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덕이나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프랑스식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직도 많은 건물공사가 여기저기 진행중이고 프랑스 정부의 지원도 큰 몫을 하고 있다한다.

맨처음 ETSI 빌딩안에 들어서서는 순간, 여기 역시 공사가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건물 한 모퉁이의 1층과 2층에 해당되는 공간이 비어있고 흙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이 생각은 틀린것임을 ETSI 방문기간 동안 나를 에스코트해준 Mr. Hubert Lea가 지적해 주었다. 영국국적인 그도 한동안은 왜 이것이 완성된 건물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프랑스사람들이 만든것이니 영국인인 그가 이야기해봤자 통할리 없다고 포기했다고 한다.

그네들이 “앳치”라고 부르는 ETSI는 1987년 유럽공동위원회(EC Commission)가 발표한 ‘녹서’(Green Paper)에서 유럽의 전기통신표준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제안한 이듬해

탄생되었다. 이때까지 유럽차원의 전기통신표준화작업은 CEPT(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그 주체가 전기통신 주관청이었다. 1992년을 목표로 단일화된 통합 유럽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의 기간구조로서의 전기통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유럽전체 전기통신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기통신 주관청 뿐만 아니라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제조업자, 시설망 제공업자, 연구단체,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럽전기통신표준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CEPT와는 별도의 조직으로서의 ETSI 탄생을 가속화시켰다. ETSI 탄생이 결정된 다음 ETSI 본부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서독간에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프랑스가 최후의 승자로 떠올라 현재와 같은 위치에 ETSI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ETSI 정관에 따르면 ETSI에 가입하려면 그 단체는 반드시 CEPT 회원국에 그 '바탕'(base)을 두고 있어야 한다.

CEPT는 현재 모두 21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EC(European Community) 회원국 12개국, EFTA(European Free Trade Area) 회원국 6개국 그리고 이 둘 어느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말타, 사이프러스, 터키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ETSI를 방문한 당시 회원의 수는 정확하게 213개 단체였다. 이는 ETSI 출범당시 예상했던 규모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애당초 50~60정도의 회원규모를 예상하고 지었던 각종 시설의 대대적인 개편은 물론 사무국조직의 대폭적인 확대작업을 해야하는 신바람나는 바쁜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ETSI가 하는 작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TSI가 표준을 만들어내는 분야는 전기통신 분야, 정보기술과 전기통신과의 공통영역, 방송과 전기통신과의 공통영역이다. 정보기술과 전기통신과의 공통영역에 있어서 ETSI는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과 공동보조를, 방송과 전기통신과의 공통영역에 있어서는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영역은 존재하는데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는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보자는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ETSI는 총회(General Assembly), 사무국(Secretariat), 기술총회(TA: Technical Assembly),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그리고 프로젝트 팀(PT)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신규회원의 가입과 연관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적 조직이며 표준은 TA-TC-PT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다루어진다. 특정분야의 표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해당 TC에 그 작업이 넘겨지는데 그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성격의 건이면 PT를 구성하여 표준안을 만들어 내게 된다. PT의 존재는 ETSI 표준작업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데 PT는 그 해당작업에만 전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일을 진행시키게 된다. 현재 ETSI에는 25개의 PT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의 표준안 제정작업은 TC에서 이루어지는데 임무를 부여받은 전문가들은 각각 자기 직장에서의 고유업무와 병행하여 표준안 제정작업을 촉진시키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진행상황을 조정한다. 이와같은 경로를 거쳐 탄생된 표준안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TA에 상정된다. 의견수렴은 유럽 각국의 공인 표준화기관을 통해 우편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9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ETSI의 경우 표준안작성에 6-7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시간경과를 단축하기 위해 표준안 작성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ETSI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모든 제품과 기술에는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이 있는데 주기가 짧을수록 의견수렴에 걸리는 시간들은 표준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한 ETSI는 필요한 경우 의견수렴이전 단계에서 표준안을 TC의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로 간행할 수도 있다. TA에서 승인된 ETSI 표준안은 ETS(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또는 I-ETS(Interim-ETS) 둘 중 하나의 형태로 공표된다. 이들은 그 자체로서는 강제성이 결여된 권고표준(Voluntary Standard)이기는 하지만 ETSI 표준작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규모, 관심과 투자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때 유럽공동위원회가 언제든지 이를 유럽전기통신 표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TSI에 대한 이해는 199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단일시장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느껴진다. 해외교역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ETSI가 만들어 내는 여러 표준작업에 어떠한 형태이든지 더 이상 참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ETSI 가입 회원의 상당수는 CEPT 회원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들이다. IBM의 경우, IBM 유럽부터 시작하여 IBM 독일, IBM 영국 등 무려 7개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

SONY, NEC, Hewlett-Packard, DEC 등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은 최소한 하나이상의 회원수를 ETSI에 확보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어느 형태의 표준화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필자는 알지 못하지만 ETSI에 참가하게 되면 최소한 동향파악 차원에 있어서 더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금년 2월 미국 프레드릭스버그에서는 ETSI, 미국의 TI, 일본의 TTC-대표적인 지역 표준화 기구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세계적인 전기통신산업의 자유화물결을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대표되었던 전기통신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CCITT, CCIR)들이 대표성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이때, 이와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통신기술협회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시기적절할 것이었고 앞으로 계속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ETSI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이번 방문을 통해 필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문은 열렸으니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한국통신기술협회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다.

표준화 관련기관소개 / 일본

▶ JUST 위원회

설립년도 : 1985년 4월

설립목적 : - JUST(Japanese Unified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

표준을 제정(통신의 국가단일 표준)

- 장기정책의 공식화

주요활동 : - 통신분야에서 추후 필요한 요구사항 조사 연구

- 가이드라인으로서 표준화의 우선순위와 제정시기 결정등